
2006년도 미국 중간선거 분석

손병권(중앙대학교 교수)

I. 2006년 중간선거 개관, 공화당 패배 원인, 그리고 앞으로 2년 후

2006년 11월 7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은 하원의 경우 28석을 증가시켜 229석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상원의 경우 5석을 증가시켜 친민주당계 무소속 의원을 포함할 경우 51석을 차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하원의 경우 아직 개표중인 곳도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과반인 218석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여 1995년 이후 경험한 소수당의 지위에서 벗어나 다수당으로 복귀하는데 성공하였다. 상원 역시 제107대 의회의 쪼갬던 막간극을 제외하면 민주당은 사실상 12년만에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게 되었다. 민주당이 언론 보도대로 28석 내외의 하원의석을 증가시킨다면 이는 제104대 의회선거 이후 양당을 통틀어 가장 큰 의석 증가로 기록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제104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에서 54석을 증가시켜 일약 40년 만에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한 바 있다. 이제 공화당은 12년에 걸친 의회집권과 6년간의 단점정부를 마감하는 시점에 서게 되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첫째, 부시 공화당 행정부 주도의 이라크 전쟁 및 전후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둘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화당 주도의 워싱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직후 백골이 진토가 될 때까지 부시 대통령과 동고동락할 것 같았던 럽스펠드 국무장관이 즉각 경질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피로감은 상당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수주 전인 지난 10월 20일에서 22일에 걸쳐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64%의 응답자가 이라크 문제와 관련된 상황의 전개가 미국에 좋지 않은 것이었다고 대답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라크 전쟁 이후 전후처리 상황과 관련된 부시 행정부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비판적인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의 당위성과 성과를 외치는 동안 이라크 주둔 미군병사들은 매일 수명 혹은 수십 명이 죽어 갔으며, 미국 납세자들의 호주머니 돈은 종착점이 보이지 않는 이라크 파병군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와 함께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 누수현상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진행되었다.

한편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포함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역시 이번 선거에서 민주

당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2005년 5월 20-22일 조사 이후 단 한차례도 50% 이상을 넘지 못했던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가장 낮은 지지율은 2006년 5월 5-7일 조사의 31%),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친 국가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은 만족도, 그리고 등록유권자 수준에서 선거 막판 10% 이상 민주당에 뒤져 있었던 공화당의 정당지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부와 입법부 양부에서 국정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인 것이었다. 국정전반에 걸친 유권자들의 비판적 입장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회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소속당인 민주당이 54개의 의석을 잃었던 1994년 중간선거와 유사한 것이었다. 양대 중간선거 모두 선거 당시 정부의 성격이 단점정부였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응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이었다. 한편 부시 대통령 임기 이후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 리비 스캔들(Libby scandal),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정보공유 문제,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 재난에 대한 연방정부의 늦장 대응문제와 여전히 미진한 회복, 로비스트 아브라모프 사건, 북한 핵실험 강행, 그리고 선거일에 근접하여 터져 나온 폴리 의원의 하원급사 스캔들 등 - 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부상한 부시의 인기와 공화당 의원 및 후보들의 선거운동 추진동력을 상당히 잠식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막바지에 터져 나온 폴리 의원 스캔들은 미국민들의 반워싱턴 정서를 더욱 부추기면서 잠재적 민주당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데 효과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지난 제1기 부시 행정부하에서 치러진 2002년 중간선거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상실한다는 선례를 20세기 이래 세 번째로 깬 선거로 기록된다면, 이번 2006년 중간선거는 인기가 추락한 대통령 소속당은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상실한다는, 하원 중간선거에 관한 중간평가이론(referendum theory of mid-term election)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선거로 기록된다. 2002년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의 승리가 대테러 전쟁의 전방위 추진 및 이라크와 미국간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안보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한 부시 대통령의 높은 인기(60% 이상 유지)에서 기인한 점이 컸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번 선거는 중간선거와 관련된 대통령 지지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 사례라고 보인다.

한편 이번 민주당의 승리는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전폭적인 신임(mandate)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공화당의 실정에 질책(rebuke)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번 민주당 승리의 연장선상에서 2008년 대선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일 것이다. 이는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이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울 후보는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에게 패배했음). 실제로 이번 선거의 최대 관건이라고 불리는 이라크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 스스로가 국가안보와 이라크 사태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미군의 철군을 가능하게 해줄 설득력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민주당은 이라크로부터 점진적 철군이 필요하고 이라크 전쟁 개시를 둘러싼 부시 행정부의 합리화에 문제가 있었음을 강하게 비판했었을 뿐, 공화당과 차별화되면서 동시에

미국의 안보와 이라크 문제해결을 보장해주는 민주당의 대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단일한 대안은 제110대 의회에서도 생각만큼 쉽고 신속하게 부상할 것 같지는 않다. 향후 2년을 주도해 나갈 양당 의회 지도자들과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제시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2008년 대선결과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라크 문제가 그때까지도 핫이슈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II. 공화당 의회 12년의 평가

2006년 중간선거를 통해서 12년간 지속되었던 공화당의 의회지배는 종식되었다. 1994년 제104대 의회선거에서 뉴트 깅그리치(Newt Gingrich)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이라는 선거공약 패키지를 통해 전반적으로 보수화된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양원장악에 성공한 공화당은 70여명에 이르는 하원 초선의원을 보수혁명의 첨병으로 삼아 다양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복지개혁 등 정책적 혁신으로부터 소위원회의 축소 등 의회제도 개혁에 이르기까지 제104대 및 제105대 의회는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상당부분 유권자들의 지지와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2000년 이후 단점정부를 형성하였던 미국은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행정부와 입법부를 나누어 맡는 분점정부의 시대로 다시 접어들게 되었다.

공화당이 지배했던 지난 12년간의 미국의회는 분점정부 시기와 단점정부 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95년 제104대 의회 개원 이후 2000년까지의 6년간은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상당한 갈등과 부분적 타협 속에서 국정을 함께 운영하였던 시기였다. 한편 2001년 제1기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2006년 중간선거 시기까지는 (상원의 경우 잠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한 시기를 제외하면) 1995년 이후 공화당 의회지배의 연장선상에서 행정부마저 공화당이 장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단점정부가 유지되었던 기간이었다. 이들 두 시기의 특징을 차별화해서 간단히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2000년을 전후한 6년간의 의회는 각각 “보수혁명으로 출범하여 대중의 지지를 서서히 잃어간 공화당 의회”(1995-2000)와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한 공화당 의회”(2001-2006)로 규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1995년 이후 2000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의 공화당 의회는 먼저 보수혁명의 기치 아래 다양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다가 서서히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어 갔던 의회로 평가해 볼 수 있다. 1995년 의회개원 이후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의원들의 육체적 피로호소를 무시하면서까지 의사진행을 강행하여 보수적 이념을 반영하는 다양한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 대체로 이러한 보수적 개혁입법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재정지출의 삭감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내용들

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혁명은 지나친 연방 프로그램의 감축에는 반대한 클린턴 행정부와 의 충돌로 인해 1995년에서 1996년 겨울에 걸쳐 부분적인 정부업무의 중지(governmental shutdown)로까지 이어졌다.

제104대 의회를 거치면서 “미국과의 계약”의 공약내용들을 입법화하려했던 공화당의 노력은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존 정부정책의 타성에서 기인한 병폐를 치유하고자 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입법과정에서 나타났던 공화당 하원의장 킹그리치의 전횡과 독선은 일반 유권자들은 물론 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도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미 언급한 부분적 연방정부 업무중지, 킹그리치 개인의 윤리문제(저서출판 계약 등), 그리고 1997년 이후에 벌어진 르윈스키 스캔들의 확대를 통한 무리한 대통령 탄핵시도 등은 궁극적으로 공화당 의회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킹그리치는 오히려 공화당의 선거승리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킹그리치의 고집에 의해 클린턴 대통령의 스캔들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된 1998년 의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5석을 잃으면서 킹그리치의 선거전략은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급기야 재선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킹그리치는 하원의장직은 물론 의원직도 사퇴한 채 정계를 은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킹그리치의 몰락과 맞물려 보수개혁 정당으로서 공화당의 이미지는 1997년 이후 상당히 퇴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유권자에 대한 호소력은 1998년 선거결과가 보여주듯이 제한적인 것이었다. 이후 새천년 이전 수년간 공화당 의회의 자생적인 경쟁력과 모멘텀은 상당부분 상실되었으며, 공화당은 제2기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경기호황과 클린턴 대통령 개인의 지도력 속에서 현상유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한편 2000년 대선 이후 2006년 중간선거까지의 공화당 의회는 한마디로 9.11 테러 사건 이후 안보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한 부시 대통령의 인기와 함께 부상하고 침몰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미국 역사상 일찍이 유사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선거결과의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공화당 후보는 민주당의 고어 부통령과의 법정 투쟁 끝에 소수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공화당 행정부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2001년 새로 개원한 제107대 의회에서 공화당은 하원의 경우 의석을 증가시키지는 못한 채 민주당에 대해서 약 10여석의 의석 우위를 유지하였고, 상원의 경우 오히려 6석의 의석을 상실하면서 다수당의 지위를 민주당에 내어 주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공화당 정부는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는 테러와의 전쟁 등을 계기로 보다 견고하고 응집력있는 행위자로 변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라크와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치러진 200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2석과 6석의 의석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안보 대통령의 인기에 편승한 의회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이후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하여 양원에서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과 대테러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전쟁 이전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상황에 대한 정보은폐 의혹, 그리고 점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열악한 상황, 그리고 폴리 의원 스캔들로 더욱 증폭된 워싱턴 정가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은 급기야 부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형식을 빌린 이번 선거에서 12년간 다수당의 지위를 구가한 공화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켰다.

전체적으로 1994년에서 2006년에 이르는 공화당 의회 12년간의 기간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 유권자층의 전반적인 양극화 현상과 함께 원내에서도 양당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시간으로 평가된다. 매우 보수적인 대통령의 입법 어젠다를 둘러싼 양당간 대립과 아울러 이라크 문제의 장기화 추세 속에서 양당 공조적인 입법노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이후 압도적이지 못한 의석 우위 속에서 공화당의 입법노력은 대통령의 지원과 인기도에 편승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원동력이 약화되면서 공화당의 선거경쟁력도 결국은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III. 2006년 선거결과와 한반도

멀리 유럽국가나 남미국가들의 선거결과와는 달리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나 의회선거 등의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가운데 일원이며, 한국의 안보문제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회 선거결과는 단지 미국전문가의 호기심이나 학문적 연구주제에 국한되어 논의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특히 북한 핵실험이 이미 실행되었고 그 결과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강성 외교정책을 표방하는 공화당이 미국의회 양원 다수당의 지위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혹은 대북한 정책에 어떤 의미를 던져 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는 근본적으로 이라크 전쟁 이후 지지부진했던 이라크 안정화 문제와 관련된 것이며, 한반도 문제는 선거의 쟁점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 110대 의회의 등장 이후 우선적으로 그 변화여부가 궁금한 사안은 한반도 정책보다는 미국의 이라크 정책일 것이다. 둘째, 이라크 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이 보장되면서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문제는 단계적인 것이든 일괄적인 것이든 그리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차기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레빈(Carl Levin) 의원 등은 점진적인 철군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미군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 등의 문제는 중동지역에 걸려있는 미국의

대외위신 및 국가이익과 관련하여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110대 의회가 개원되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문제만큼이나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부시 행정부의 정보조작 혹은 은폐와 관련된 조사가 의회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현안문제로 거론될지도 모른다. 이 경우 하원의장이 될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의원이나 상원 원내대표가 될 해리 리이드(Harry Reid) 의원 등의 중재역할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문제에 대한 조사가 정말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철군 등의 논의는 정당간 갈등에 휩싸여 상당 기간 진전이 없거나 연기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부시 행정부의 독주경향은 분명히 견제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실제의 면에 있어서 정책의 근본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정책에 있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 즉 행정부 감독권, 감시권, 의회 고유의 재정적 권한, 행정부에 대한 외교사안 보고 요청권 등이 발휘되면서, 전시 등 국가적 위기의 상황논리에 매몰되어 정책결정과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의회의 정책참여 요구가 강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17일 대통령이 서명한 존 워너 방위수권법(John Warner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상 대이란 조항(Sec 1213)과 대북한 조항(Sec. 1211)의 이행은 행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그 실행이 압박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라크 전쟁이 쟁점이 되면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번 선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지위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수당 지위의 변화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 혹은 북한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타당한 예측 때문에 그러하다. 이러한 예측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전제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라크 정책을 포함하여 미국의 대한반도, 대북한 정책 등 외교정책은 행정부의 변화가 아닌 의회 다수당의 변화만으로 신속하게 바뀌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최대쟁점이었던 이라크 정책 역시 변화에는 갈등이 수반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를 수는 없을 것이라는 필자의 예측이 옳다면, 선거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한반도 문제 및 북한 문제가 의회 다수당의 변화로 인해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결론은 성급한 것이다. 이는 특히 북한 핵실험이 실행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둘째, 미국은 의심할 여지없이 핵개발 및 핵확산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으며, 소위 불량국가들에 의한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북한은 핵개발 이후 성공적인 핵실험을 내외에 공인했으며, 북한은 미국이 보는 불량국가의 하나이다. 따라서 미국은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견해는 민주당에 의해서도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양원 장악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및 대북한 정책과 관련하여 아무런 변화의 추동력이 되지 않는 것인가? 소위 언론에 회자되는 “북한과 미국간의 직접대화”의 가능성이 이번 선거결과 탄력을 받는 것은 아닐까? 민주당 지배하의 의회가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의회가 요구할 수도 있을 양자간 직접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형식에 관계없이 양자간 대화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미국측 목적은 북한에 대한 이해와 양허보다는, 부시 행정부가 지난 6년간 성취하지 못한 북한의 핵개발 폐기를

위한 것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요컨대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결과의 면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으므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민주당 의회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촉구가 있게 된다면 이러한 촉구의 강도는 이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 혹은 의회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외교위원장이 될 바이든(Joseph Biden) 의원은 과거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 당시 합의된 틀이 북한의 핵개발 억지에 상당히 유효했다고 믿고 있으므로, 다시 이러한 방식의 합의를 타진해 보라고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 납세자들의 정서에 민감한 연방의회 의원들이 매년 일정액의 예산이 소위 불량국가의 하나에 투자되는 이러한 방식의 합의를 직접 대화를 통해 다시 만들어 내라는 요구에 얼마나 동조할 지는 의문이다. 물론 이와는 다른 형태로 의회는 북한 핵폐기를 위한 합의를 만들어 내라고 행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의회의 강도나 방식이 어떠한 여전히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것은 결국 부시 행정부에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사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지만 선거를 전후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일관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특히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외교정책에 있어서 부시 행정부의 협조를 통해 최소한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된다면 더욱 그러하다. 양당 공조는 부시 대통령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안보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민주당도 원하는 바일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2년 남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실패여부에 관계없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했다는 점과 이미 유엔의 대북한 제재는 이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이미 세계에 선포된 북한의 핵실험은 그렇지 않았으면 혹시나 그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클 수 있었던 민주당 의회하의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축소시킨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보인다. ■

내용 문의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04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